

오피니언

월/요/광/장

최협



설연휴 인터넷 공간에선 대통령이 손녀를 데리고 시장의 구멍가게에서 과자를 사는 사진 한 장 때문에 시끌벅적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려진 사진을 보고 어느 네티즌이 이 대통령의 손녀가 입고 있는 흰색 패딩 점퍼가 3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제품이라고 댓글을 달자, 대통령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글들이 인터넷과 트윗, 그리고 페이스북 등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때마침 요즈음 선거철의 정치구호가 1%와 99%의 대결구도를 상징하는 것이 유행이어서 이러한 사례는 상징적 차원에서 정치적으로도 이용될 가치가 매우 높았다. 그런데 얼마 후 다른 네티즌이 손녀가 입은 점퍼가 300만 원대의 고가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은 현 정부의 지도층이 서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기존의 시각을 또 한 차례 보강한 뒤였다.

그런데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현상은 진보와 보수 가리지 않고 피해자를 발생시킨다. 한 예로 얼마 전, '도가

니'를 쓴 작가 공지영은 '사벌백 논란'에 휘말렸다. 발단이 된 것은 공지영이 지난해 인터넷방송 '나는 꼼수다' 탐과 미국 공연을 다녀오면서 사벌백을 매고 비즈니스석 출입구로부터 걸어 나오는 모습이 담겨 있는 한 장의 사진이었다.

공지영 작가는 사진에 찍힌 가방이 사벌 백 제품이 아닌 평범한 다른 브랜드임을 밝혔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공씨가 99%의 서민을 위한다면 정작 자신은 1%의 삶을 산다고 비난했다.

이상과 같은 현상을 놓고 학자들은 '사이버 폭포 효과', '분열 소통', '탄환 소통'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 즉 '사이버 폭포 효과'란 인터넷상에서 검증되지 않은 유언비어가 대중의 감성을 자극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한번 발신된 정보는 신뢰성이 확인되기 전 폭포처럼 쏟아져 사회에 충격을 준다는 뜻이다.

'분열 소통'은 몇몇 비슷한 사람끼리 자주 교류함으로써 그들끼리 만의 견해를 강화시키는 반면 여타 사람들과는 더 소원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그리고 '탄환 소통'은 정보 발신자가 내보낸 메시지에 수신자가 충양을 맞듯이 영향을 받는 현상을 지칭한다.

그런데 인터넷에 연결된 IT 기기가 광범위하게 보급됨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과정이 혁명적으로 변화되어, 이제는 오히려 평범한 시민이 쓴 '충양'을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맞고 비틀대는 상황이 올 수 있게 되었다. 실

소셜미디어의 정치적 활용

제로 근래에 우리 사회에서는 네티즌의 악플 때문에 유명인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보였었다.

정보혁명에 분병 인류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작년 중동을 휩쓸었던 자스민 혁명도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발달과 보급이 한 몫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한국에서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와 민주통합당의 당내 경선에서 그 위력을 과시한 바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적절한 윤리와 합리적 관리를 필요로 하기도 한다. 특히

정보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의 하나는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개개인들이 어떻게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가려낼 수 있는가이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정보의 양은 실로 엄청난 것이어서, 지난 3년간 세계의 웹에서 유통된 정보의 양은 1.2 제타바이트(ZB)로, 이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단위로 환산해보면 한 사람이 매일 한 시간씩 TV를 본다고 가정할 때 약 1억2500만 번 간 시청할 수 있는 양이라 한다. 이렇게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노련한 논객들은 입맛에 맞는 사실들을 골라내 그것으로 사람들을 분노케 하고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

금년은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이다.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소셜미디어의 정치적 활용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래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공적 사안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높인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보의 신뢰성·집단 동조화나 사회적 분열·분극화 같은 문제에 대한 염려가 공존한다. 필요한 것은 유권자들이 기술의 편향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특성에 유념하는 깨어있는 참여자가 되는 것이다. <전남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조칼럼



강동원

변호사들의 법관평가결과가 연일 언론보도에 등장하고 있다. 서울에 이어 부산, 울산, 창원에 이어 광주에서도 최근 지방변호사회가 우수진법관 5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사실 소송당사자의 의뢰를 받은 재판이 해결제인이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재판진행과 관련 법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내 판사의 반말이나 비속어 등 거친 표현과 고압적인 자세 등이 재판을 받는 당사자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분명하다.

사법권도 어느 권력처럼 국민에게서 나온 것일진대,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

우수 법관? 나쁜 법관?

지 못한다면 법원이 제대로 그 역할을 다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결론에 있어서 옳은 재판'을 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며 그에 못지않게 재판질차가 공정하고 당사자의 주장 내용을 판사가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는 법관으로 임용되기 전 7년간 변호사였다. 당시를 돌이켜보면 의뢰인들은 항상 법관이 자신의 주장을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해 했고 변호사가 사건 담당판사와 접심이라도 같이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판사에게 자세히 이해시켜 달라며 식사 값은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의뢰인들에게 "그런 격정일랑 하지 마라.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변호사는 사기꾼이다. 판사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열심히 일하는 줄 아느냐"고 하면 그 중 일부는 나에게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거나 판사들과 친하지 못한 변호사'라며 실망스런 표정을 보이기도 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소장이나 판결문은 밑에 있는 사무장이나 계장들이 쓰고 변호사나 판사는 도장이나 찍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기도 했다.

과거 변호사 시절, 그리고 지금 동료법관들을 살펴봐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관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청렴하고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다. 법관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한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항의까지 받는 경우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에 대한 해답 중의 하나는 '정의는 행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행해지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영국의 법인(法諺)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실제로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시위하거나 소란피우는 사람들이 받은 판결 내용은 다른 판사가 재판을 했더라도 그 결과가 같을 것이다. 그러나 법정에서 당사자들이 듣고 재판하는 시간보다 판결문 작성하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사법현실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판결문 작성에 지나치게 정성을 기울이는 사이 그와 같은 결론이 이르게 될 수밖에 없음을 당사자에게 마음을 열고 친절하게 설득하는데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반문해 볼 일이다. 사실 한 페이지가 겨우 한두 개의 장문으로 이루어진 난해한 판결문을 시원스럽게 해독할 만한 당사자들은 많지 않고,

판결문만으로는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법관으로서 '친절'하다는 것은 법정에서 당사자들을 정중하게 대하며 당사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해보면 요즈음 법관들은 구술증언과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애쓰고 있고, 법정에서 당사자들이 하는 말을 듣는 데에 보다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법관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법관은 사건에 대한 인내, 변호사에 대한 인내, 사건 당사자에 대한 인내, 증인에 대한 인내가 필요하다. 법관은 친절함을 갖추어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말하도록 하고 이를 경청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법정에서 법률적 조치가 의미 없는 감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모순되거나 무지한 주장을 하고 있는 당사자가 바로 국가의 녹봉을 받는 법관의 존재이유이고 또한 그들이야말로 법관의 '의뢰인'인 것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천재와 바보의 차이가 빠지 한 장 차이라고 하듯 우수 법관과 나쁜 법관의 차이라는 것도 결국은 친절 한 곳 차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단정일까? <광주지방법원 민사18민독 판사>

기고



문상필

추경예산 심의가 끝나고 지역을 돌며 한 해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와 새해인사를 다니고 있다. 임진년 새해를 맞아 다들 분주하고 활기차며 일 년을 계획하고 희망을 꿈꾸는 모습들을 보면서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연말연시가 되면 누구보다 바쁘게 지역 구석구석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 바로 각종의 통장님들이다.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모금해야 하고 어려운 이웃도 챙겨야 하는 등 동행정의 보조자로서 잡다한 일들을 맡아 처리하며 얼마 되지 않는 월급 아닌 월급을 받으며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을 챙기시는 분들이다. 하지만, 그간 통장님들의 한숨소

이웃돕기 성금 모금 강제 할당은 안 된다

리가 컸던 것 같다. 각 자치구의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이 자발적이지 못하고 실적위주로 변질되면서 통장들을 동원하여 18~30만 원까지, 심지어 130만 원까지 모금액을 할당하는 등 강제적인 모금이 이뤄져 왔기 때문이다. 이는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자치구의 잘못된 관행이다.

2012년 1월 현재, 희망 2012 나눔 캠페인 전국 모금현황을 보면 광주시는 목표액 대비 99.3%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나 모금 실적으로 따져보면 광역시단위에서는 최하위이고 전국적으로도 제주를 제외하고 가장 저조한 실정이다. 물론 목표금액을 적게 잡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으나 목표액이 적다는 것은 광주시의 기부문화가 그만큼 활성화되지 못해 자발적인 기부가 적어 성금모금이 어렵다는 말인 것이다. 때문에 목표액을 맞추기 위해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할당을 주고 성금 모금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자치구에서 동으로 동에서 통장들에게로 할당을 주고, 이는 고스란히 통장들의 부담이 되어 일부 할당을 채우지 못한 통장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할당금액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비에서 일괄 각출하는 방식으로 모금을 해서 부담이 덜하지만 주택단지든 가가호호 방문을 통한 모금을 해야 하기에 방문 시 성금을 착복한다는 오해와 귀찮게 한다는 금지 않은 시선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부문화 활성과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는 통장들에게 지정한 모금액을 요구하고 부담을 주는 관행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만 한다. 강제적인 모금행위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및 기부에 대한 거부감을 조성할 뿐이며 금액은 적더라도 자발적인 따뜻한 마음으로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이 더 큰 힘을 발휘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한다. 우리나라 기부문화는 OECD 30개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다. 광주시 또한 전국적으로 최하위 수준이다. 선진국이나 선진도시는 경제적인 수처로만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 민주적이고 평등한 삶의 질이 확보되었을 때 비로소 선진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행위를 통한 계층간 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나눔과 기부문화가 정착되었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 선진국이며 선진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눔과 기부문화는 사회의 어느 한 부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개인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더불어 관과 기업,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함께 노력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광주시가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세계 속의 광주를 지향한다면 이웃돕기 성금 모금과 관련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생활 속에 건전한 나눔과 기부문화가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막대한 예산지원만이 사회복지가 아니라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으로 나눔의 사회를 만드는 것 또한 복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식량 유전자원 확보, 호남지역 농촌도 관심가져야

지금 우리가 먹는 밀가루는 99%가 수입산이다. 그래도 과거에는 우리가 밀을 재배해 먹었지만 타산이 맞지 않아 지금 농촌에서 거의 재배하지 않기 때문이다. 굳이 재배하지 않는 밀가루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토종 씨앗 자원, 즉 식량자원의 중요성과 우리 농도에서 나오는 씨앗자원이 얼마나 중요하지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예전에 한 노벨상 수상자가 '얇은빵이 밀

유전자 하나가 1억 명의 생명을 살렸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얇은빵이 밀? 그게 뭘까? 얇은빵이 밀은 세계 식량의 30% 증산에 이바지한 우리나라의 작고 귀여운 토종 밀이다.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얇은빵이 밀, 키가 작아 강한 바람에 잘 견디는 특성을 이용하여 세계사에 이름을 남기고 인류를 배고픔으로부터 구원해 주었다.

얇은빵이 밀의 유전자는 엄청난 생명을 살렸고 또 다른 새로운 품종의 탄생에 밑거름이 되었다. 1960년대 밀 하나가 1억 명의 생명을 살렸다면 오늘날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유전자원을 보유한다면 1억 명이 아닌 그 이상의 60억 지구인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가 너무 기대된다. 세계는 지금 침묵으로 식량전쟁 중이다. 가족의 먹이인 사료를 만드는 밀과 옥수수 등 모든 게 으르면 사료 값이 뛰고 그렇게 되면 가축생산 단가가 높아져 고깃값으로 전가된다. 즉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 각국은 자국의 식량 유전자원은 보호하고 외국의 유전자원은 경쟁적으로 확보하려는 데 모든 국가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유전자원은 새로운 육종의 재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은 종다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므로 우리도 식량유전자원 확보는 물론, 그것의 유출을 막는데 힘써야 한다. 아울러 이 같은 노력을 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청정 곡창지대인 우리 전라남도 농촌에서 더욱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일림·보성군 문덕면>

시설

등록금 인상 주범 기성회비 수술 불가피

국공립대의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27일 서울 중앙지법의 판결은 기성회비 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할 필요성을 또다시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당 법률 없이 관행에 의지해 등록금의 대부분을 거둬온 대학과 정부에 내려진 철폐나 다름없어서다.

상급심에서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국공립 대학들은 지난 10년간 거뒀던 기성회비를 모두 돌려줘야 할 판이다. 현재의 대학 등록금 가운데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6%에 달하고, 돌려줄 기성회비 총액이 10조 원에 이른다.

기성회비 문제가 이토록 심화된 것은 무엇보다 정부와 대학이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963년 문교부 훈령을 통해 기성회비 징수를 결정한 뒤 학교 시설·설비비 및 교직원 연구비, 기타 학교운영 경비 등에 한해 사용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대학들은 절차가 까다로운 수

업료 대신 손쉬운 기성회비를 대폭 인상하는 방법으로 재정을 늘려왔다. 2010년 수업료의 경우 2006년에 비해 5% 오르는 데 그쳤으나 기성회비는 30%나 뛰어 전세 등록금 인상을 주도한 것이다. 등록금 중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함은 물론 목적 외 지출마저 일반화해 지탄의 대상이 됐다. 전납대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 2002~2010년 기성회 회계에서 교직원 인건비로 무려 1644억 원을 지급했다.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 하나 기성회비에 대한 근본적 수술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사립대학들은 1999년 기성회비 반환소송이 제기되자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일원화함으로써 파장에서 비껴날 수 있었다.

국공립대학들은 이번 판결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 정부 역시 책임을 지고 적극 수습에 나서야 할 것이다.

스크린경마장 확장 '도박 광주' 만들려나

한국마사회 광주스크린경마장이 불황 속에도 호황을 누리면서 각종 규모를 크게 늘리고 지정과석제까지 도입했다고 한다. 사행산업을 확장해 시민들을 도박의 굴레에 몰아넣었다는 지철한 속내에 분노마저 치민다.

마사회 광주지점은 이달부터 5~9층에 지정과석제 1946석을 확충, 기존 2~4층 3090석을 포함한 5036석 규모로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서비스 개선을 이유로 기존 입장료 800원보다 10배 이상 비싼 1만 원짜리 지정과석제도 도입했다. 매출액이 매년 10% 이상 늘어나자 170억 원을 새로 투자해 수익성을 더 높여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마사회 측은 이에 대해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며, 방문객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개인당 점용면적이 늘어난 만큼 수익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변명인지 논가리고 아용하는 격이다. 누가 보더라도 치사한 돈벌이의 일환

이며, 한번 빠지면 헤어지지 못하는 스크린 경마 중독자들이 늘어난 각종 시민 증가할 것은 뻔한 이치다. 불행에 가깝거나 어려운 시민들에게 일확천금을 노리는 세태를 부추기고 사행산업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는 이미 '도박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온갖 사행산업이 번창하고 있다. 함심하게도 그걸 국가가 장려하는 꼴이다. 기금 사용목적에 그럴듯하게 포장했을 뿐 국가가 공인한 도박장에서 선량한 시민들이 한탕주의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도박 중독증에 걸려 헤어지지 못하고 있는 환자만도 부지기수다.

시민 스스로 사행성 도박에 빠져서는 안 되겠지만 해당 지자체인 광주시와 동구청은 '래저세'라는 미명하에 이를 결코 묵인해선 안 된다. 철저히 규제해 건전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도 국민이 건강할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행산업을 일대 정비할 필요가 있다.

無等鼓

선거권이 있는 모든 국민이 투표로써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를 직접 선출하는 현행 대통령 직접선거제도(直選制)는 오랜 민주화 투쟁의 산물이었다. 1987년 6월 항쟁은 군부 독재정권을 종식시키고 직접제 개헌을 이끌어 냈다. 그해 12월 제13대 대통령 선거는 16년만에 직접선거로 치러져 한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었다.

대통령 직선이 그 때 처음은 아니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제헌헌법에서는 간선제가 채택됐지만 9차례 헌법 개정을 거치면서 직선제(2~7대)와 간선제를 오가는 변화를 겪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정착 이후 사회 모든 분야에서 직선제는 민주화의 상징이 되었다. 대학에는 1991년부터 총장 직선제가 도입돼 화내 민주화와 자유화에 이바지했다. 하지만 소모적인 파벌싸움과 공약 남발로 인한 재정 낭비, 정치권 쟁치는 탈법·훈탁선거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일부 언론사는 편집국장 등에 대한 직선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교육자치의 핵심인 교육감 직선제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됐다. 대표행위 등 비리와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간선제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으며, 후보자 당 선거비용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반면 유권자의 무관심으로 투표율이 낮게 나타나는 등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검사장 직선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민주통합당 지도부 경선과정에서 후보들이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며 미국처럼 각 지방 검찰청장을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뽑는 제도를 제안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6일 올 상반기 모든 분야에서 직선제는 민주화의 상징이 되었다. 대학에는 1991년부터 총장 직선제가 도입돼 화내 민주화와 자유화에 이바지했다. 하지만 소모적인 파벌싸움과 공약 남발로 인한 재정 낭비, 정치권 쟁치는 탈법·훈탁선거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일부 언론사는 편집국장 등에 대한 직선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정홍식 정치부장 who@kwangju.co.kr

직선제



| | | | |
|---|------------------|------------------|---------------------|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회장 金鐘宅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 논설주간 申港梁 | 편집국장 曹庚完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1간111 광주광역시 동구 남영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 문화생활부 2200-661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홍보국 2200-541 |
| 편집부 2200-649 | 여론재무부 2200-621 | <F A X 222-8005> | <F A X 222-0195> |
| 정경부 2200-612 | 체육팀 2200-697 | 광고매케팅국 227-9600 | 독자서비스국 2200-551 |
| <대표 FAX 222-4918> | 사진부 2200-693 | <F A X 227-9500> | <F A X 227-9500> |
| 사회부 2200-616 | 조사부 2200-571 | 디자인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 <대표 FAX 222-4267> | 전산팀 2200-685 | 기획사업국 2200-555 | <F A X 02-773-9335>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